

자유교육을 통한 학부 교육의 재정의*

- 대학 소멸 위기의 근원적 해법

박일우**

- I. 들어가는 말
- II. 자유교육의 실체
- III. 자유교육의 새로운 사명
- IV. 학부 교육의 재정의
- V. 맺는말

■ 국문요약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원인은 인구절벽, 수업료 동결, 경제침체만이 아니라 대학의 내부에도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면서 자율성과 정체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였다. 이 글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야 하는 ‘파괴적 혁신’의 일환으로 학부 과정에서 자유교육의 수용을 통한 자유학예대학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자유교육은 오늘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다. 인공지능은 자유교육의 새로운 학습 대상이며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한 역량 함양은 자유교육에 내재 되어 있다. 개별 학문

* 이 글은 2023년 6월 17일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명예교수, ilwoo@kmu.ac.kr

분야별로 만들어진 단과대학-학과라는 전통적 편제는 이제 그 효력을 다하였다. 학과·전공을 기초 행·재정 단위로 구성된 대학 편제를 기각하고 학부 교육을 자유교육으로 재정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부 과정이 담당 하였던 심화 수준의 전문·직업교육은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교육과정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차원의 추세이다.

모든 대학교가 혁신을 할 수 없다면, 우선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시범 자유학예대학을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학부 교육의 재정을 통해 대학의 소멸을 억제하고 건강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의 소멸, 자유교육, 자유교육의 효용성, 자유학예대학, 인공지능, 시민 교육

I. 들어가는 말

대학의 위기를 넘어서 대학 ‘소멸’의 단계가 시작되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단 관련 기사들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¹⁾ 일반의 정서로는 마치 우리나라 대학 상당수가 불필요했던 기관들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대학의 소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런데 대학 소멸의 이유는 대학 밖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대학 안에서 끓아온 병변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난 2~30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이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매달려 있었다.²⁾ 물론 인구

1) 예를 들어 <이게 대학인가요?... 20년 청춘 바친 교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2023. 4. 30.

2) 정부의 대학교 재정지원 사업의 효시는 1963년 ‘대학교수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이다. 1990년대는 사립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이 있었으며, 2004~2007년에는 특수목적(선별)지원, 2008~2013년에는 포물러 편

절벽, 수업료 동결, 경제침체가 대학 소멸의 직접적 요인임은 사실이다. 이제 이런 식의 책임 전가도 한계에 도달하였다. 재정지원을 대가로 하는 각종 평가, 공모 규정에 맞추어 대학의 보유 역량과 무관하게 무리하여 편제와 교육과정을 뜯어 맞추기를 반복하다 보니 그 퇴적물이 독소가 되어 결국 때 이른 소멸을 재촉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은 근본적인 성찰을 할 여유도 없었으며,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제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 다가온다.³⁾ 이 시점에서 대학 소멸의 근본적인 해법은 하나이다. ‘파괴적 혁신’이라도 동원하여 대학을 진정한 대학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서구는 물론, 글로벌 사회에서 수 천 년 전통에서 진행되었지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우리나라에서만 무시되어 온 자유교육 liberal education⁴⁾의 전면적 도입이 그것이다. 향후 20~30년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별 대학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자유교육의 실체를 통시대, 공시대로 나누어 알아보고, 자유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시대적 맥락에 따른 자유교육의 새로운 사명을 제기하고 학부 교육을 재정

정 방식을 도입한 취업률 중심 평가와 제재 기제로서 재정지원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 대학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끈 사업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을 대가로 하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대학 인문 역량 강화사업(CORE)’,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이 있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대학은 2025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이를 위한 ‘시범지역(2023~2024년) 운영’을 앞두고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 3) 특이점이란 문명의 미래 발전에서 가상 지점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을 뜻한다(위키백과). 커즈와일은 2005년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40~50년대를 특이점으로 지목한다. 최근 ‘생명의 미래 연구소 Future of Life Institute’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들이 ChatGPT의 GPT4 모델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 노력을 6개월 정도 중단하자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으나, 한번 시작된 수직사업 모델의 매력에 촉발하는 인간의 탐욕이 억눌러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 4) 미국 대학협의회(AAC&U)는 자유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교육은 일과 시민권, 삶에 필수적인 구체적 학습 성과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통합하고 학문 학습과 체험 학습의 통합을 촉진하는 학부 교육 접근법이다.”

의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공·학과제 폐지와 그 대체 방안으로 학부 교육은 자유교육으로, 전문·직업교육은 대학원에서 시행하기를 제안할 것이다.

II. 자유교육의 실체

1. 자유교육의 통시대

자유교육은 자유시민이라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기 위해 모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리스·로마의 관념에서 자라났다. 그리스의 ‘파이데이아 *παιδεία*’는 실용적 기술이나 기능뿐 아니라 인간의 덕성을 개발하며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때 ‘자유민’이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여성, 노예, 노동자, 외국인들을 제외한 부자 혹은 실력자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으며⁵⁾,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웅변술을 필두로 하고, 지적 사고나 진리 추구,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전통적이며 귀족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주가 되었다. 카펠라는 자유학예교육의 일곱 가지 분야를 묘사하였다⁶⁾. 주지하듯, 이 가운데 ‘삼학 *trivium*’은 그리스 시대에 확립되어 로마에 전달된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영역인 논리학, 문법, 수사학이며 이들이 기초가 되어 물질세계를 이해하는 ‘4과, *quadrivium*’ 즉 산술, 음악, 기하학, 천문학이 그것이다. 로마의 키케로 Cicero 는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를 ‘후마니타스 *humanitas*’로 발전시켰다. 지식교육과 사고력, 의사소통, 정서·신체 교육이었던 파이데이아에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이라는 뜻을 덧입힌 것이다. 후마니타스는 지식을 배우

5) 신분제가 제도적으로는 소멸된 오늘날, 세계 시민은 모두 ‘자유인’이며, 자유교육은 모든 문명사회의 시민에게 필수적인 교육이 되었다.

6) *De nuptiis Philologiae et Mercurii (On the Marriage of Philology and Mercury)*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이 책은 전형적인 알레고리 형식을 가진다. ‘Philologiae’, 즉 ‘진리를 사랑하는’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신인 머큐리의 결혼식에 일곱 하녀가 등장한다. 이것이 자유학예 교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영(2020)은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혜를 기르고, 인간다움을 가르치며,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구에서 자유교육은 중세에서 체계화되어 지리적 발견, 종교개혁, 계몽주의, 혁명, 산업화와 같은 변곡점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졌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대학이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술 관련 학문이 자유학예와 과학교육 과정과 혼합되었다. 자유교육의 전통은 유럽 대학교들이 대부분 단일 주제, 예를 들어 수학, 역사 혹은 예술에 전문화된 모델을 선택하면서 스러졌다. 19세기 들어 독일의 연구 중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은 더욱 단일 학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고등교육이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이러한 단일 학문 트랙을 따른다.

고등교육에서 학제적 자유교육의 전통이 다시 주요 양상으로 대두된 것은 미국에서이다. 자유교육의 이념은 식민지 대학에서부터 채택되어 많은 민주적 수칙들을 제공함으로써 독립 공화국이 “더 완전한 연합”을 만들도록 촉구하였다. 하버드 대학(1636)을 비롯한 초기 대학들은 자유로운 사상과 토론의 이념에 근거한 모델을 따랐다. 1828년 예일보고서는 미국 특유의 고등교육 이념을 표명하는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폭과 깊이를 가진 교육과정을 가지는 자유교육은 학생들이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준비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점을 부각한다.

지적 문화에서 얻어야 할 두 가지 요점은 정신의 훈육 discipline 과 채비 furniture 이다. 그 위력을 확장하고 이를 지식으로 강하게 하면서 말이다.

(Marber 2017, 3에서 재인용)

예일보고서는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는 자유교육의 의도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앞 시대에서 형성되어 온 자유교육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맥락을 상세히 규정한다. 학습 영역은 인간의 전체 지식을 망라하지만, 이는 특정 분야의 입문 수준이 아니라 학제적 접근을 지향하며, 더 나아가 인격의 완성과 지적 발달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모든

대학에서 학부 과정의 목표이며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완전한 교육의 기초를 깔려면 중요한 ‘모든’ 정신 능력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배양되고 다른 것들은 무시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Marber 2017, 3에서 재인용)

미국 고등교육의 성공이 단순히 원칙의 천명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릴 법 Morrill Act’은 “다양한 직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 계급을 대상으로 자유교육과 전문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주마다 하나의 대학에 토지를 부여하는 법으로 미국 교육을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연결해 주었다. 이 법은 <버니바 부시 Vannevar Bush 보고서 - 과학, 끊임없는 전선>(1945)으로 이어져 기초연구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특유의 기부 문화 역시 미국 초기 대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를 들어 1636년 Massachusetts General Court(식민지 인종 회사 지배기구) 지원으로 설립된 칼리지는 3년 후 기부자 이름을 따 Harvard College로 발전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2. 자유교육의 공시대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외에도 남미,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의 앞서 나가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자유교육을 도입하였거나 하는 중이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이전의 고등교육 체제가 단일 학문 학위로 이루어진 곳에서도 일부 자유학예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혁신과 비판적 사고를 제고한다. 『글로벌 시대 자유학예의 발전』(Marber·Araya, 2017)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유교육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와 교육

담당자들의 육성을 실었다.

벤데 Marijk van der Wende 는 최근 유럽에서 자유교육의 재 도래를 다룬다. 유럽의 고등교육은 국가 기관과 단일 학문 과정에 국한되었으며 공공 재정, 대규모, 평등주의에 입각한 체계는 20세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21세기 지식 경제에 대비하는 졸업생들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벤데 는 조기에 시작하고 지나치게 전문화하는 고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엄선된 엘리트 교육을 모색하는 암스테르담 학부대학 Amsterdam University College의 사례를 보인다. 탄 Charlene Tan은 싱가포르의 Yale-NUS College 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이해를 확인한다. Yale-NUS College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으며 비판적 사고는 대립적 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데 비해, 이 대학을 지지 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아시아의 역사적 실체와 한계 가운데 있으며, 비판적 사고도 문화적으로 매립되어 있고 여기에 협조적이라 본다.⁷⁾ 누리 Neema Noori는 중동에서 그 증거들을 탐색한다. 18세기를 전후하여 형성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정치 체계, 역사·사회적 균형을 가지지만 공통적 주제가 제기되었다. 젊은 인구와 중류 계층의 성장세가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많은 고등교육 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리퍼드 Grant Liford는 아프리카의 자유교육 발전과정을 조사한다. 그는 유럽 식민지 유산이 아프리카 사회와 교육기관에 걸쳐 자유교육과 연관된 총체적 고등교육 모델을 촉진했다고 본다.⁸⁾

3. 자유교육의 가시적 성과

자유교육은 정의 자체가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자유교

7) 주지하듯 이 대학은 2021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2025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University Scholars Programme (USP)와 합쳐진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언급한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박일우(2021) 참조.

8)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각 지역의 자유교육 현황을 조사한 『글로벌 시대 자유학예의 발전』에서 대한민국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교양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하는 ‘자유교육’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육의 경제적 이익, 자유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신입생, 부모들의 현실적인 동기를 논의하자면, 자유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을 얻는다는 실증적 증거는 넘쳐난다. 그 가운데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1.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육과 인력 센터’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자유학예대학의 ‘투자 대 비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추가되면서 자유학예대학의 평균 ROI가 모든 칼리지의 평균 ROI보다 거의 20만 달러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유학예대학 출신 40년 평균 ROI (91만 8천 달러)는 4년제 공대 및 기술 관련 학교 (91만 7천 달러), 4년제 경영대학원 (91만 3천 달러)에 근접한다.

사례 2. 뉴욕타임즈 기자이며 풀리처 수상자인 앤더슨은 자유교육 졸업생들을 종단조사하여 그들의 평생 수입이 컴퓨터공학, 경영학 전공자들보다 많음을 밝혔다(Anderson, G. 2019).

사례 3. 경제학자인 최강식 외는 최근의 연구에서 교양교육과 임금의 관계가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최강식·박철성, 2023).

물론 자유교육을 경제적 효율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교육의 진정한 성과, 혹은 효용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상,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적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게 하고 “만능의 열쇠를 손에 쥐어주는” 것(최재천, 2015)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시민의식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테트와일러는 최근의 저서 『자유학예가 필요로 하는 증거 *The Evidence Liberal Arts Needs*』에서 자유교육이 성공, 리더십, 이타주의,

학습, 평생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면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네 가지 핵심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Detweiler, 2021; 223-228)

- 목표: 자유(학예)교육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더 높고 더 공적 성격의 선에 종사한다.
- 내용: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지식의 모든 영역의 연구와 다양한 지식 범주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
- 맥락: 자유(학예)교육은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강력한 환경을 요구한다. 자유교육은 지적, 개인적, 감정적 참여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 교육 생태계: 더 높은 공공선이라는 목표는 자유(학예)교육의 맥락 가운데서 자유(학예)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충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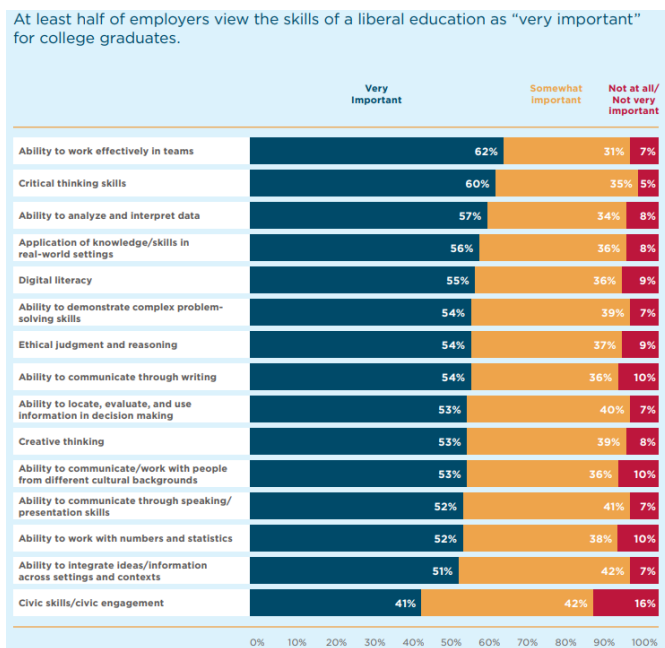
III. 자유교육의 새로운 사명

1. 새로운 자유교육

이른바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이분법은 해묵은 이슈이다. 그러나 자유교육의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이러한 논쟁은 오래전에 해소되었다. 예를 들어 밀 J. S. Mill은 이미 1867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총장 취임사에서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밝혔다.

대학의 목적은 썩서 좋은 법률가, 의사,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
능성 있으며 교양 있는 인간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 전공 분야가 무엇

이든 (...) 그 지식을 지혜롭고 양심적으로 사용하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의 여부는 전공 분야를 배운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일반 시스템이 개발한 어떤 종류의 지식을 어떤 마음과 의식에 가져다주었나에 달려 있습니다. (...) 전문 공부를 한 사람이 대학교를 떠날 때 가져가야 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 전문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지도하고 특정 분야를 비추는 일반 문화의 빛이어야 합니다.(박일우 외, 근간)



<그림 1> 고용주가 본 대학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https://dgmg81phvh63.cloudfront.net/content/user-photos/Research/PDFs/AACUEmployerReport2021.pdf>

교육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때,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을 통한 인간의 완성에 있었다. 자유교육의 역사가 곧 교육의 역사였다. 그런데 자유교육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 목표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덧붙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여타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대학 졸업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취업이라 국한하더라도, 미국 대학 협의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 결과(<그림> 1)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학 졸업생들의 역량 항목 가운데서 ‘전공지식’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며, 고용주 50% 이상이 “자유교육에서 얻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⁹⁾ 실은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오늘날과 내일의 인간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자유교육이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과 공감, 협업 능력은 인공지능의 도전에 맞선 지금, 더욱더 그 가치를 더 한다.

2. 인공지능의 도전과 응전

디지털이 추동하는 기술혁명(…) 배려나 염려와 같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이타적이고 공생적인 나눔의 새로운 경제체제와 사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타자성, 신뢰, 나눔, 배려, 환대, 공감과 같은 인간적 가치와 정서적 교응은 이타적이고 공생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윤리 의식이다.

(김동윤, 2023:12)

인공지능의 발견과 발전의 함의는 언어의 발견에 비견할 만하다. 인간 언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가 비유기체에 의해 수행될 때 그것은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만들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자유교육의 새로운 학습 대상이며 동시에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요컨대 인공지능이 진화하면 할수록 인간도 진화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임무는 기존의 특정 학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교육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자유교육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 나갈 절호의 기회를 인공지능에서 얻었다.

9)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대졸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공 여부와 이수 학점을 따지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전공’자가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를 접할 수는 없다. 첨단분야 졸업생이 입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전공을 살려” 그 직무에 남아 있는지, 직무 성격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넘어선 수준을 넘어서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시민교육

자유교육은 학문 발전에 따라 성립된 기초학문 분화에 더해, 인공지능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집단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즉 ‘시민교육 Civic Education’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자유교육이 노동할 필요가 없었던 ‘자유 시민’의 필수 과정이었다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시민은 “노동하는” 자유 시민이며, 오늘날의 자유교육은 이들 모두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시민교육과 자유교육의 관계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낳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인성 함양 Cultivating Humanity』에서¹⁰⁾ 민주주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 즉 소크라테스 식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 상호 연결의 이해, 내러티브적 상상력을 꼽았다. 이 역량은 앞에서 논의한 자유교육에 내재되어 있으며, 반대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자유교육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노력이 있었다(교육부, 2022). 누스바움은 “글로벌 연결 시대의 시민교육”이라는 글에서 시민교육과 자유교육의 이상과 방법이 결합 되는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밝게 불이 켜진 한 세미나실에 젊은 교수들 한 그룹이(...) 한 달 동안 케냐를 방문하여 아프리카 촌락을 연구하였던 일을 두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은(...) 영양, 일부다처제, 에이즈, 그 외 많은 것에 대한 지역의 논쟁에 참여하였는데 이제 그 경험을 미술사, 철학, 종교, 여성학 등의 교과

10) 이 책의 원제목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은 국내에서 “인간성 수업 : 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으로 번역되었다. 이를 자유학예교육 이론의 맥락에 맞게 번역하면 “인성 함양 : 자유교육의 개혁을 위한 고전적 변론”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사례는 개별 학문 가운데에서 다국가,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다양한 사회의 시민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고등교육 현장의 교육에 활용할 방법을 자유교육의 틀에서 찾아보라는 누스바움의 권유로 읽힌다.

IV. 학부 교육의 재정의

1. 전공·학과제 폐지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학과제의 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박병철은 전공선택제와 유연학기제 등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한 2017년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입학 단위 없이 모집하는 무전공제나 단과대학 별로 모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결정은 대학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쉬운 일은 아니며”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다음으로 무슨 과를 다니는가라는 물음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박병철, 2019:175). 그런데 이제 그 학과가 차례로 문을 닫는 현상이 도래하였다. 종합대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단과대학-학과라는 전통적 편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농경사회 특유의 ‘우리끼리’ 의식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학과·전공제는 대학이 대학다움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요소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공·취업 분야 일치도는 50%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다. 그나마 50%라는 수치도 2020년 조사 결과로, 2020년 이후에는 같은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수치도 특히 지방·사립·인문

계열 졸업생이나 교수로서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대학원까지 포함한 취업률(<그림 2>)을 곱하면 결과는 심각해진다. 대학, 대학원 졸업자를 망라하여 30%도 정도만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면 나머지 70%는 왜 그 전공·학과를 찾았는가? 이럴 바에야 ‘전공’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은가? 어차피 전공/타전공의 기여는 반반이니, 각종 관변단체에서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전공 선택의 벽을 낮추는” 것보다는 아예 허물어 버리고, 학과라는 오래된 “교수들의 帝國”을 거두기라도 하자는 것이다. 학과제도가 유럽 대학교들의 단일 주제, 즉 학문별로 전문화된 모델에서 나왔다면, 학문의 발전과 이 합집산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대에 특정 학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과제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장애물로 남게 된다.

(단위: %, %p)

구분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2021(A)	67.7	58.2	63.9	63.0	69.9	65.0	82.1	66.6
2020(B)	65.1	53.5	60.9	62.1	67.7	62.3	82.1	62.2
증감(A-B)	2.6	4.7	3.0	0.9	2.2	2.7	0.0	4.4

<그림 2>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상황, KEDI, 2021.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7>

2. 학부교육의 재정의

대학의 소멸은 기정사실이며 배워야 할 지식은 폭증한다. 이런 시점에서 대학은 “배우기”를 멈추고 “배우기를 배우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적어도 고등교육에서의 학부 undergraduate 과정에서는 자유학예 liberal arts¹¹⁾가 전격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자유학예, 혹은 ‘기초학문’에 덧붙여 새로 대두되는 다양한 지식체계들을 협량한 학과·전공의 틀에서 벗어나 습득하도록 한다면 그 프레임은 ‘자유학예대학 liberal arts college’, 즉 자유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단설 대학, 혹은

11) 자유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전통적 3학(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4과(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과 학문의 분화 발전과정에서 대두된 인문학, 사회과학뿐 아니라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을 포함한다.

대학교 산하의 독립 단과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대학의 중언이 아니라 부활이며, 전통과 정통으로의 회귀이다. 대학이 다시 대학다워지는 것이다.

신입생을 유치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첨단, 융합학문의 이름을 외피로 둘러쓴 학부 과정 학과·전공일수록 교육과정과 교수의 역량이 여전히 이전의 것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¹²⁾ 학부에서의 교육과정으로 ‘첨단’, ‘혁신’을 표방하는 눈가림은 그만둘 때가 되었다. 학부 교육의 목표는 ‘첨단’이 아니라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학문 선진국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학부였던 의학, 법학은 전문대학원으로 진작 옮겨갔다. 첨단 기술, 공학 분야는 물론, 심지어 심화 차원의 기초학문은 대학원 과정이나 별도의 ‘스쿨 school’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부분의 대학교와 기타 우수 대학교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는 자유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12개의 ‘스쿨’로 구성되어있다(<그림 3>).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는 첨단학문 심화 연구와 교육은 대학교 universit , 그랑제콜 grand  cole, 그랑데타블리스망 grande  tablissement 과, 나아가 그들의 연합체가 담당한 지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파리인문사회대학교 Universit  Paris Sciences et Lettres, PSL’는 파리 도심에 위치한 콜레주 드 프랑스 Coll ge de



<그림 3> 하버드 대학교 편제

<https://orgs.law.harvard.edu/studentgovernment/harvard-graduate-council/>

12) 신입생, 부모, 교사들은 오히려 이런 생소한 학과명에 두려움을 느껴 입학할 망설이고, 교육과정의 실체를 알면 실망한다. 탄탄한 종합병원을 재단에 두고 바이오 분야를 특색화한 지방의 모 종합대학교에서 막상 첨단 바이오 분야 학부, 학과에서 가장 심각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반면, 최근 국내에서 불어닥치는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을”이라는 풍조는 고등교육의 진행 과정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의사의 역할은 제일 먼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미래의 의대생들은 막상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인공지능 시스템 오퍼레이터 역할에 만족하는 ‘기능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France, 국립사범학교 Ecole Normale Supérieure, 고등교육 실습원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파리 도핀 대학교 Université Paris Daupine, 퀴리 연구소 Insitut Curie 등 가장 경쟁력을 갖춘 연구·교육기관들의 유기적 조직으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의 최첨단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편제가 학부 과정과 그 이상의 연구·교육 편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학부 과정은 온전히 자유교육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존재 이유를 충족한다. 자유교육은 대학원 교육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3. 자유교육 운영의 원칙

1) 자유학예대학 설치에 관한 기존 논의

교육은 공공재이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학계에서는 국립 자유학예대학 설치의 논의가 있었다. 백승수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국가 전략 분야 연구,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발전 선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상기하면서 “기초학문 육성을 통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립 자유학예대학을 신설”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백승수, 2018). 이 주장은 두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는 기초학문의 인적지원과 인프라를 그나마 확보하면서도 소위 “교양교육”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특히 2000년 초반 CORE 사업을 앞두고 많은 대학이 명목상으로나마 교양교육 전담 학부, 대학을 만들 때도 국립대학은 요지부동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당분간은 소멸의 과정을 유예받은 국립대학교가 파괴적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백승수의 주장 가운데서 언급한 “교양교육 general education”은 자유교육과 다르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상호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고등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자유교육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교육 기반의 교육과정에서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구별은 없다.

박병철의 논의는 현실적이면서 좀 더 신중하다. 그러나 “리버럴아츠칼리지 설립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리버럴아츠 교육이 자리 잡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단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박병철, 2019: 174)라는 그의 진단은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한 편, “지방 사립대”를 자유학예대학으로 전면 재편하고 “지방” 국립대는 학부 폐지 후 대학원 과정 체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표출되었다(대학지성 In & Out, 2021. 06. 10).¹³⁾ 이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이 글의 논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 주장이 ‘위기에 빠진 대학 체제 대전환’이라는 맥락에서 발표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유학예대학으로의 전환을 “지방·사립”이라는 특정 그룹을 전제함으로써 마치 한계 대학에 마지막 회생 기회라도 베풀자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고등교육에서 자유교육이 가지는 위상과 현황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한계 대학에 자유교육 라이선스를 준다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학 소멸의 바이러스는 수도권에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신입생 유치를 위해 ‘국립’이라는 단어를 교명 앞에 붙이려는 안타까운 노력을 하는 국립대학교들이 나타나는 데서 보듯, 이제는 국립대학교마저도 소멸의 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UNN, 2023. 04. 10). 자유교육은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대학의 구별 없이 고등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수용할 때, 기존 학과·전공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2) 자유학예대학의 운영 원칙

자유학예대학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모든 대학교가 일시에 혁신을 할 수 없다면, 우선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시범 자유학예대학을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¹⁴⁾ 자유학예대학 운영 원칙은 다음

13) 따옴표는 필자

14) 역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교를 광역권으로 나누고 각 광역권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때로는 이 광역권의

과 같다:

- 설립 주체는 반드시 기존 대학교, 특히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일 필요는 없다. 기존 대학, 신규대학, 국·공·사립,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별 없이 자유교육을 잘 이해하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 당국의 인가 절차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최근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태재대학교’ 법인 설립, 대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인가는 교육 당국이 다양한 대학 생태계에 관심을 보여준 고무적인 사실이다. 혁신대학 설립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움직임이 자유학예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주제	인문·예술	사회과학	수학 및 자연과학
인간 본질	인간의 본성(이성, 감정, 윤리, 미의식, 욕망)		
인간 행위	언어, 기억, 감정, 예술, 믿음(종교)		
삶과 생명의 터전	인간과 생명체의 터전(자연, 공동체, 민족, 국가, 역사, 지리, 규범)		
삶의 방식	문화와 관습, 정치체제, 경제체제, 금기와 가치, 미적 향수		
자연의 본질	시간과 공간, 물질과 생명에 대한 인문·예술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상상, 탐구 및 그 한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수학을 포함, 자연 탐구 및 자연의 가치 설정		

<그림 4> 학문분류와 주제 분류의 연계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

- 교육과정은 “모든 것을 다루되 결합기식”이라는 약점을 가지는 배분이 수 원칙을 탈피하여 주제 중심 접근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과 기초학문교육을 망라하는 교육과정

구획 자체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접근은 광역권 내에서 모범 사례를 생산하였고 인근의 대학들이 이를 벤치마킹하는 효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범 자유학예대학 역시 먼저 광역권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모델을 제안하면서 주제중심형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예시를 들었다. 이 가운데서 학문분류와 주제 분류의 연계 방식(<그림 4>)이 자유교육의 본질 중 하나인 학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핵심 교과는 기존의 전공 과정에 준하는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핵심 교과의 내용은 대학 입시 준비 과정으로 전략한 중등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중등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 자유학예대학 졸업생의 학위중에 전공 분야는 명시되지 않는다. 다만 재학 동안 개인의 선호와 적성에 따른 교과군의 선택이 있었고 거기에서 취득한 학점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하버드 대학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집중 concentration’ 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 새로운 자유학예대학은 소멸 대학의 인프라를 수용함으로써 설립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된 캠퍼스가 폐허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함께 국가적 낭비이다.
- 자유학예대학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종합대학교의 학부 과정을 대신한다. 즉, 신입생 모집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교수이다. 그동안 기초학문이 무너지면서 이를 담당하던 교수자원 중 일부는 교양교육을 마치 최후의 도피처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학부 과정이 자유교육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때, 기존의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 전공·학과라는 편제에서 여전히 “내 교과목”, “내 학생”에 연연하는 교원들은 퇴출되거나, 자유교육의 역사와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대학의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대학의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며 교육정책 역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논의가 불필요한 당위이다. 그럼에도 이 당위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제안은 별무한 실정이다. 이 글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나누어진 고등교육의 편제에서 학부 과정의 교육 내용은 자유교육으로 회귀하고 편제는 자유학예대학을 지향하자는 논리를 개진하였다.

자유교육의 통시태는 교육의 내용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자유교육의 공시태는 종주국이라 할 만한 미국에서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명시적인 자유교육이 자유학예대학의 틀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우리나라에서 자유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학예대학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학부 교육의 목표와 범위가 왜곡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학문의 발전과 시대적 맥락에서 전공·학과제 위주의 학부 교육 프레임은 효력을 다 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 소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전공영역과 일자리의 일치 여부는 미미하며, 반대로 자유교육의 생산성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음이 여러 경로에서 입증되었다. 학부 교육과정에서는 전공·학과의 장벽을 낮추는 데서 더 나아가야 전공·학과를 폐지하고 자유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부 영역의 심화를 통한 전문·직업 훈련은 대학원 과정에서 진행하는 보편적 모델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상 소멸이 다한 교육기관들도 이런저런 정부 재정지원에 매달려서 근근이 연명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 중인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

을 골자로 한다. 거기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언뜻 보면 무너져 가는 지역 대학을 살리는 새로운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는 중앙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대학’으로 2026년 30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것도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 당장 2023년 ‘시범대학’ 선정이 5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난 데서 보이듯, 2026년에 탈락하는 대학들은 필사적으로 2차, 3차 선정을 요구할 것이며, 선정된 대학들도 그동안의 습성대로 ‘이행 목표’를 각종 보고서에서나 달성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폐습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가?

한정된 자원은 한정된 곳에 써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 “대학을 대학으로 되돌려 놓는” 사업에 천문학적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질 대학은 퇴적물 없이 산뜻하게 출발하여 지원 받은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인공지능을 능가하면서 진정 역사를 만들어갈 인재들의 산실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윤, 2023, 「디지털과 윤리: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윤리의 새로운 지평』, 디지털소사이어티 디지털문화위원회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9-13.
- 레이 커즈와일 저, 2007, 김명남·장시형 옮김,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 박병철, 2019, 「리버럴아츠 교육과 한국의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제13집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63-180.
- 박일우 외 편역, 근간, 『자유교육의 전개_영국편』, 교양교육총서 2, 리버럴아츠.
- 백승수, 2018, 「국립 리버럴아츠칼리지 설립의 교육적 타당성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12집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63-180.
- 윤우섭, 2021, 「위기의 대학, 교양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 이수연, 2017, 「대학 재정지원 정책 평가와 대안」, 『대학과 정책』1, 대학교육연구소, 125-148.
- 최강식·박철성, 2023, 「교양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개인의 임금과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제17집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1-22.
- 한수영, 2021, 「자유교육은 어떻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자유교육 옹호를 위한 역량기반자유교육의 역사적 검토」, 『교양교육연구』, 제15집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1-22.
- 홍석민, 2021, 「교양교육에 남긴 1828 예일보고서(The Yale Report of 1828)의 유산」, 『교양교육연구』, 제15집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3-40.
- Anderson, G., 2019, *You Can Do Anything - The Surprising Power of a "Useless" Liberal Arts Education*, New York: Back Bay Books.
- Dewey, J., 2011, *The Evidence Liberal Arts Needs: Lives of Consequence, Inquiry, and Accomplish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arber, P., D. Araya eds. 2017, *Liberal Arts in the Global Age*, New York: Routledge.
- <교실에서 만나는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2022. 4. 13. <https://if-blog.tistory.com/13182>.(검색일 : 2023. 04. 15)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최재천(2015), KBS 1 TV <명견만리>, <https://www.youtube.com/watch?v=bBVUTXeQDrQ>(검색일 : 2023. 04. 15)

<비수도권 소재 13개 국립대, 교명 앞에 ‘국립’ 붙인다>, UNN, 2023. 04. 10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4778>(검색일 : 2023. 04. 15)

<위기의 대학...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는?>, 대학지성 In & Out, 2021. 06. 10,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1>(검색일 : 2023. 04. 15)

<이제 대학인가요?... 20년 청년 바친 교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2023. 4. 30.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4/29/V3ZS57VGFRC4RFTUHK46GXIXXU/>, 2023년(검색일 : 2023. 04. 30)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KDI Focus, 2020. 06. 09,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623&media=poplink (검색일 : 2023. 04. 15)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67.7%...월 평균 275만원 벌어>, 대학지성 In & Out, 2022. 12. 27,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7> (검색일 : 2023. 04. 15)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검색일 : 2023. 04. 15)

<How College Contributes to Workforce Success: Employer Views on What Matters Most> <https://www.aacu.org/research/how-college-contributes-to-workforce-success> (검색일 : 2023. 04. 15)

<Ranking ROI Of 4,500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https://cew.georgetown.edu/cew-reports/CollegeROI/>(검색일 : 2023. 04. 15)

<What is Liberal Education>, <https://www.aacu.org/trending-topics/what-is-liberal-education>(검색일 : 2023. 04. 15)

Redefining Undergraduate Education Solutions to the University Extinction Crisis

Park, Il-Woo
(Keimyung University)

The university began to disappear. The cause was not only the population cliff, the freezing of tuition fees, and the economic downturn, but also the inside of the university. Korean universities gave up their autonomy and identity while relying o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is article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liber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courses as part of a ‘destructive innovation’ that can make universities more like universities.

Liberal education, which began in Greece, is given a new mission today.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new learning object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cultivation of capacity for the survival and progress of democracy pursued in civic education is inherent in liberal educatio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created by individual academic fields no longer takes effect. Now, the university system consisting of bas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units for departments and majors should be dismissed and undergraduate education should be redefined as liberal education. It is a global trend to entrust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to the curriculum of each department and major of graduate school based on solid liberal education.

If all universities cannot innovate, the government should firs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establish pilot liberal art colleges by region. Through the redefinition of undergraduate education, it will be possible to suppress the disappearance of universities and continue the ecosystem of healthy higher education.

Keyword ● disappearance of universities, liberal education, utility of liberal education, liberal arts college, artificial intelligence, civic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3. 06. 07. ▮ 심사완료일 : 2023. 06. 18. ▮ 게재확정일 : 2023. 06. 19.

